

근대적 절대군주제와 국왕모독죄: 타이 정치체제 재검토

박은홍*

I. 문제제기

지난 2014년 5월 쿠데타를 주도한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쿠데타 직후 253명에 대해 소환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방면된 대부분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왕으로부터 쿠데타를 승인받은 군부는 정치적 통제 강화를 “국가행복회복”(큰깜속하이 빠라텃타이) 캠페인과 함께 진행하였다. 2016년 8월에는 군부 주도로 만들어진 신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되었다. 이 신헌법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원 구성을 전면적으로 임명제로 바꿔 군부가 사실상 상원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1932년 민과 군이 연대해 절대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꾼 입헌혁명 직후만 해도 군과 왕실 관계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1932년 입헌혁명 때 민간세력을 대표했던 빠리디 빠놈용(1946.3.24-1946.8.23)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장파 군 엘리트들과 왕당파가 협력하며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텃다. 이후 1958년 왕당파격인 싸릿 타나랏(1958-1963)의 군부 쿠데타가 성공하고, 이들이 왕실 성역화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왕실 지위가 복원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1946년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ehpark@skhu.ac.kr

에 즉위한 푸미폰 아둔야뎃(1946-2016) 국왕의 생일인 12월 5일은 아버지의 날, 왕비의 생일인 8월 12일은 어머니의 날로 정해졌다.

그러나 왕실과 군부의 밀월이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시기는 1981년 출범한 쁘렘 띠술라논(1981-1988) 군부정권 하에서다. ‘쁘레 모크라시’(Premocracy)라 불리던 당시 타이는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안정돼 동남아 신흥국 반열에 올랐다. 정치적 안정은 게릴라투쟁을 벌이던 공산주의자들과 학생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정책(쁘렁당) 덕분이었다.

반면 쁘렘 정권에 도전한 두 차례의 쿠데타를 방어해준 푸미폰 국왕은 1987년 60세 생일에 쁘렘 정권으로부터 ‘대왕’ 칭호를 받았다.¹⁾ 푸미폰은 1973년에 이어 1992년에도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군사정부 측과 반군부 측의 수장인 쑤찐다와 잠령을 불러 적대적 세력간의 자비로운 중재자이자, ‘국민통합의 제도적 안전판’(Chai-Anan 1989: 256)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탁신 친나왓(2001-2006) 전 총리는 민주화로 군부 역할이 줄고, 고령이 된 국왕의 공식 활동도 뜸하던 시점에 부상한 정보통신재벌 출신 정치인이다. 1997년 타이 경제위기 직후 타이애국당(타이락타이)을 창당한 그는 2001년 1월 총선에서 서민을 위한 기초의료보장 제도와 농촌개발지원사업 등을 공약하고 실제 이를 이행했다. 이른바 ‘탁시노믹스’(Thaksinomics)는 성장 정책에서도 성과를 거둬 기업인 수천 명을 회생시켰다. 그러나 지지도가 상승곡선을 그리던 2006년 1월 탁신 일가가 19억 달러(약 2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시민사회 주도의 탁신 퇴진 운동이 일파만파로 번졌다(Thitinan

1) “쁘렘은 상처를 입으면, 왕실을 방문하곤 해 주사를 맞은 후 원기를 회복하곤 했다. 그가 찻뜨라다 왕궁(국왕의 거처)에서 나오면 그의 적들은 바로 뒤로 물러섰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정당성 위기를 겪었던 쁘렘 정부가 8년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왕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김홍구 2010: 69).

2008: 143).

반탁신 시위대를 일컫는 이른바 옐로셔츠는 군주제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왕실의 색깔인 노란색을 채택했으며 탁신이 공화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피하고 그 자신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타이다움’(Thainess, 캄뻬타이)에 해당하는 민족, 불교, 국왕의 적으로 몰아세웠다. 탁신의 정책 자문단에 한때 공산주의자란 혐의를 받았으나 1980년대에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그들에겐 눈엣가시였다.

옐로셔츠에게 레드셔츠는 문자상 국왕의 사람을 가리키는 ‘암맛’을 제거하고 탁신체제를 수호하려 하고, 암맛의 제1인자 추밀원²⁾ 원장 뿌렘 띠술라논이 2006년 왕당파 군부의 쿠데타를 기획한 당사자라고 보는 세력이다(Somboon 2000; Somchai 2011). 또 이들에게 레드셔츠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후원주의에 의존적인 집단이다. 반면 레드셔츠에게 옐로셔츠는 비록 높은 교육수준과 부를 갖고 있지만 “군부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발상을 하고 군주제에 대한 절대 충성을 ‘타이다움’으로 간주하는 전근대적 사고를 하는 세력이다.

탁신의 실각과 망명, 타이에국당 해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2006년 쿠데타는 탁신을 둘러싼 찬-반 세력간 교착 국면에서 발발했다. 방콕 중산층들이 주를 이룬 반탁신계 옐로셔츠 진영은 내심 군부 쿠데타를 반겼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북부, 동북부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친탁신계 레드셔츠는 탁신 실각 후 처음 실시된 2007년 12월 총선에서 탁신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 힘당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자 옐로셔츠는 곧장 탁신체제 종식 투쟁에 나섰다 2008년 11월 말에는 수완나폼 국제공항을

2) 추밀원(싸파웅카몬뜨리)은 1932년 입헌혁명 이전인 1927년 라마 7세하에서 설립되었다.

점거하는 등 고강도의 정권 퇴진 투쟁을 벌였다. 결국 타이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집권당인 국민의 힘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때 일부 친탁신계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이적함에 따라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다. 그러나 레드셔츠는 2009년부터 선거 없이 출범한 아피싯 민주당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반정부 투쟁을 벌였고, 2010년 4월과 5월에는 아피싯 민주당정권에 저항하다가 유혈진압을 당했다. 마침내 레드셔츠는 2011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며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2011-2014)을 수반으로 하는 프어타이당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2013년 프어타이당이 탁신의 정치적 사면을 노리는 법개정을 시도하자 2010년 레드셔츠 유혈 진압 당시 실질적 책임자였던 수텡 전 부총리가 이끄는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가 잉락 정권 퇴진 투쟁에 들어갔다. 방콕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PDRC는 마침내 2014년에 7개월간의 반정부 시위 및 점거 투쟁을 하던 끝에 군부 힘을 빌어 잉락 정권을 무너뜨렸다. ‘탁신 포비아’(Thaksin phobia)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방콕의 중산층은 쿠데타를 지지하였다.

푸미폰 국왕이 2014년 5월 쿠데타를 승인한 마당에서 쿠데타 반대 운동은 국왕모독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커졌다. 군부는 자신을 옐로-레드간 정치화해를 돕는 중립적 중재자라 내세웠지만 군부가 국왕 모독죄를 수단으로 반쿠데타 세력의 입을 막는 상황에서 ‘중립’은 치장일 뿐이었다.

주목할 것은 2006년 쿠데타 이후 국왕모독죄³⁾ 적용 사례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의 회귀(Supalak 2014), 혹은 과거

3) 국왕모독죄를 타이어로는 “민프라버툼데차누팜”(หมิ่นพระบรมเดชานุภาพ)이라고 하나 이 법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를 위반하다는 의미에서 흔히 “탐핏 능능쌩”(ท.พ.112)이라고 일컫는다.

싸릿 군부정권 시기에 제창되던 ‘타이식 민주주의’(Thai-style democracy, 뿌라차띠빠다이뻬타이)로의 회귀로 보기도 한다. 이를 두고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에서 반(半)민주주의 시기를 거쳐 민주주의로 진입했다가 공고화에 실패한 전형적인 ‘제3의 민주화 역물결’(Third reverse wave of democratization)로 볼 수도 있다.

타이에서의 관료적 정체로의 회귀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다른 나라에서의 역물결(reverse wave)과 차이가 있다. 첫째,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쿠테타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나섰다는 점, 둘째, 역시 1973년과 1992년에 반군부 민주항쟁을 주도하였던 시민단체, 불교단체, 학생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시민사회조직의 대다수가 쿠테타를 우회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거나 묵인하였다는 점, 셋째, 이러한 민주당과 시민운동조직의 지지 기반이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쿠테타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슬로건을 지지한 ‘탱크 리버럴’(tank liberals, Ji 2010)이라는 점에서 1973년과 1992년 민주화와 관련된 ‘중산층 주도설’(玉田 芳史 2003: 82)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쿠테타를 전후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왕모독죄(lèse-majesté law)의 적용사례가 커짐으로써 관료적 정체로의 회귀와 국왕모독죄 간의 친화력(affinity)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글은 2014년 쿠테타 이후 타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관료적 정체 혹은 반민주주의로 보는 시각이 헌법 위의 국왕과 왕실의 존재, 그리고 왕실 자문기관인 추밀원(Privy Council)을 매개로 한 왕실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고, 이른바 국왕모독금지법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가 대폭 강화된 1976년 이후 타이의 정치체제는 관료적 정체, 반(半)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독특한 유형의 ‘근대적 절대군주제’(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를 확립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이후 현재의 타이 정치체제는 동의

(consent) 혹은 포용(inclusiveness) 수준이 가장 낮은 근대적 절대군주제의 하위 유형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타이가 과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따른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II. 기존 타이 정치체제론 검토

1960년대에 타이 군부가 고안한 ‘타이식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와 선거가 입법부에 능력과 책임성, 그리고 정직한 인물의 선출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유선거와 의회권력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면서, 국가안보 및 군사행정과 정치, 민간행정간의 구분을 없애고 군부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이었다(박은홍 1994: 149). 결국 ‘타이식 민주주의’는 관료적 정체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의 다른 이름이었다.

타이 정치체제를 지칭했던 프레드 릭스(Riggs 1966)의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는 전통적 체제도, 근대적 체제도 아니다. 즉,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분화된 관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체제와 다르며, 관료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비관료적 제도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근대체제와도 다르다. 또한 전체주의체제와 같이 공식적인 유일당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관료체제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근대적 다두정(polyarchy)도 없다. 특히 기업가 집단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으며 천민적 기업가(pariah entrepreneurs)에 불과하다.

수에히로 아키라(末廣 昭 1993a: 67-68)는 관료적 정체로서의 타이 정치체제를 관직 자체가 권력, 위신, 부의 원천이라는 점, 군, 경

찰, 관료기구의 권력이 막강하여 이에 대항하는 의회, 정당, 기업가 집단,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등 관료체제 외부세력이 미발전하여 취약하다는 점, 이로 인해 정치변동은 관료 내부 엘리트간 투쟁의 형태를 띠게 되고, 정책결정도 관료체제 외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적다는 점, 사회관계는 군, 관료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여 후견인-피후견인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로 엮여있다는 점, 경제활동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정치권력과 결탁된 피후견인 자본가와 이권을 추구하는 관료자본가가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아넵 라오탐마닷(Anek 1988: 451-452)도 유사한 맥락에서 관료적 정체 안에서 사회집단과 계층들은 수동적 존재로 남아 있게 되고 정책결정의 권한은 소수 관료엘리트에게만 주어지며, 따라서 비관료적 집단들의 조직적이고 자율적인 정치활동은 비공식적이면서 특수한 통로를 통해서, 혹은 피후견인의 위치에서 미약하게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 관료적 정체론의 적실성이 쟁점이 된다. 차이아난(Chai-Anan 1989a)은 1973년 10월 이후 타이에서의 사회변동을 인정하면서도 백련정부 이후의 정치체제로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를 거론하기도 하나 관료적 정체가 새로운 사회경제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켜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차이아난은 1978년 헌법체제를 타넘-빠라팻 권위주의체제와도 다르면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체제도 아닌 그 중간에 위치하는 반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없는 자유화 조치라고 일컫는다.⁴⁾

4) 다이아몬드 등(Diamond et al. 1989)이 정의하는 반(半)민주주의는 민선 공직자의 권한과 정당경쟁이 제약을 받으며 경쟁적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제약되어 있어서 정치, 사회적 집단들이 자유로이 결성될 수도, 또한 자신들의 이해를 자유로이 표출할 수도 없다(Diamond et al. 1989: 17). 이들은 반민주주의에 포괄되는 국가들로서 타이를 비롯해 세네갈, 짐바브웨, 말레이시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차이아난이 보다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은 사회경제적 변동의 산물로 은행인협회(Banker's Association), 산업인협회(Association of Industries), 상업인회의소(Chamber of Commerce) 등과 같은 신특권 집단들이 경제현안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지만, 이들의 참여는 군부관료의 대등한 동반자가 아닌 자문역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차이아난은 타이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성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군부는 정치권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쿠데타를 상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반대세력과 정당정치는 존재하고 있지만 다원적 민주주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자본가 활동의 특징을 경제관계에서의 후견인-피후견인(patron-client) 관계에서 찾은 바 있는 수에히로(Suehiro 1989)도 재벌의 새로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지만 차이아난과 마찬가지로 군의 권력지배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즉, 1980년대에 들어와 자본가 집단, 경제 테크노크라트들의 역할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지만 타이 정치체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에히로(末廣 昭 1993b)는 이러한 의미에서 타이의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을 정치구조와의 연관하에서 이해한다.

그는 타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군부 스스로가 정치에 경제를 종속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청년장교그룹이 부정행위를 하는 은행인, 상업인, 독점기업을 배제하고 군부가 직접 경제개발에 개입하려고 했지만, 썬렘정부 이후부터 테크노크라트와 기업가 집단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두 번째로 수에히로는 낙투라 깃 간므영으로 불리우는 정치지향형 자본가와 타이경제의 확대와 신흥공업경제(NIEs)화를 주도해온 재벌, 중견제조업 등 권력의지가

없는 경영중시형 자본가 이 두 유형의 자본가 집단을 거론한다. 전자의 경우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70년대 후반부터 뚜렷한 성장을 보였고 차차이 민선정부 시기의 각료들도 대개 이러한 유형의 자본가들이었다. 반면 후자의 경우 내부적으로 알력이 계속되는 정당정치와 군부의 강권지배 양자를 모두 원치 않고 오직 안정적인 경제정책의 실시를 중시하는 집단이다(末廣 昭 1993a: 69-70).

반면 1970년대 이후의 정치적 변화와 자본가의 성장, 그리고 그들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자립화를 중시하는 아넥(Anek 1988: 1992)은 관료체제 외부세력이 군부관료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예컨대 아넥은 1980년대의 정책결정과정을 검토하면서 당시 경제정책은 이미 군과 전통관료 뿐만이 아니라 자본가집단내의 관-민협력기관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 주목하면서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로부터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liberal corporatism)으로 전환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넥은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기업인 결사체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을 들고 있다. 점증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사회적 위신, 이들이 갖고 있는 채용 및 투자결정권, 내각 및 국회, 정당으로의 진입 등으로 인해 오늘날 비관료적 집단으로서의 자본가 집단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즉, 반(半)민주주의는 경쟁적 정당, 선출직 국회의원, 자유선거 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적 정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의 분배의 측면에서도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왕실 이외에 비관료적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정책결정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Anek 1988: 470). 아넥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관료적 정체가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이라면 반(半)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이라고 주장한다(Anek 1992: 13).

요컨대 기존 타이 정치체제론의 핵심적 개념은 관료적 정체와 반민주주의로서, 전자는 국가기구가 군부관료의 장악하에 있는 체제이고, 후자는 여전히 국가기구가 군부관료의 장악하에 있으나 국가기구 외의 정치사회세력을 제한적 수준에서 용인해주거나 자본가가 군부관료와 대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체제이다. 이는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부르주아 정체(bourgeois polity)로의 확장과정을 의미한다.

Ⅲ. 타이식 민주주의의 귀환과 근대적 절대군주제

1946년 아난 국왕이 의문사하자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급부상한 1932년 혁명세력내 급진파의 지도자 뿌리디 빠눔용을 축출하려는 쿠데타가 1947년 11월 8일 왕당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어났다. 이들의 일차적 목표는 뿌리디 지지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다.⁵⁾ 그러나 1948년 1월 선거에서 가까스로 제1당이 된 민주당의 쿠영 과도수상을 밀어내고 다시 피분이 수상직에 오르면서 이후 10년 가량은 왕당파를 지지하는 소장파 군부 엘리트들과 이들을 견제하고 하는 피분 송크람(1938.12.16-1944.8.1; 1948.4.8-1957.9.16)의 공방전이 지속되었다. 특히 피분이 주도한 1951년 쿠데타는 왕위를 이어받기도 6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던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이 귀국하기 직전에 일어났는데 1947년에 제정된 존왕주의적 헌법을 폐기함에 따라 푸미폰 국왕은 1932년 수정헌법에 따라 ‘정치 위’(above politics)에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32년 입헌혁명 국면에서 패배한 왕당파는 새로운 의회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다. 이를테면 외국에 적극적인 로비를 했고, 혁명을 이끈 민간 지도자 뿌리디 빠눔용을 몰아내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 유포하기, 반란 꾀하기, 화교들의 폭동 선동, 군부내 불만의 씨 뿌리기 등등을 행하였다 (Unaldi 2012: 9).

존재해야 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피분수상이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잃자 푸미폰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Handley 2006: 134).

결국 피분은 1957년 왕실의 지지를 받는 군 실세인 짜릿 타나랏이 이끈 쿠데타로 실각했다. 짜릿이 주도한 존왕주의 쿠데타 이후 푸미폰은 짜릿의 ‘타이식 민주주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국가적 사안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63년 짜릿이 죽자 그의 카리스마가 사라진 공백을 틈타 존왕주의가 더욱 득세하였다. 특히 군 부정권이 대중들로부터 신임을 잃자 1973년에 국왕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학생운동을 지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왕당파는 민주주의의 담론까지 가로챌 수 있었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푸미폰은 불교의 계율을 몸소 실행하는 반인반신(demigod)으로 간주되었다. 여기 에다가 기부금과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왕실이 주도하는 자선 프로젝트가 추진되자, 국왕모독금지법의 견제를 받는 충성스러운 언론 매체까지 동원되어 푸미폰 국왕은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얻는 부패한 정치인들보다 더 나은 통치자로 묘사되었다. 이로써 푸미폰은 진실의 상징이자 자유와 참여의 가치를 담은 타이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푸미폰 국왕하의 타이 입헌군주제는 정치 위(above politics)에 있는 듯 하나 실제로는 정치 안(in politics)에 있는, 또 헌법이 규정한 한도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듯 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입헌군주이나 전통적인 절대군주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묘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Kobkua 2002: 61).

한편 푸미폰은 1976년에 학생 일각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1973년 학생시위로 망명하였다가 비밀리에 귀국한 타님 끼띠까쑤(1963-1973)의 거처를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국왕의 암묵적 사면(赦免)에 반감을 갖고 있던 학생들의 저항이 있

었지만 유혈진압되었다. 이른바 ‘혹 풀라’⁶⁾로 지칭되는 이 사태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단지 특별한 덕망을 갖추고 있는 ‘국왕의 재량권’(flexible kingship) 정도로 비추어졌을지도 모르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구었던 진보적 요소를 일거에 폐기하고 과거로 회귀시킨 반동적 행위였다(Elliot 1978: 115). 이후 왕실의 목인 하에 이루어진 이 사태에 대한 어떠한 진실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Ji 2007: 63) ‘타이식 입헌군주제’ (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 Kobkua 2004) 하의 정치현상으로서 ‘근대적 절대군주제’(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로 정의내릴 수 있는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타이식 군주제이다.⁷⁾

무엇보다도 근대성이라고 한다면 근대화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행위자로서 군부, 사법관료, 행정관료, 교수, 언론인 등의 지식인,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정당, 일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농민, 학생 그룹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군주네트워크(network monarchy)와 관련이 깊다. 1992년 반군부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 민주당의 지도자였던 추언 립파이(1992-1995, 1997-2001)의 경우도 왕실과 국왕 수호를 명분으로 했던 2006년 쿠데타 불가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친탁 신계 잉락 정부 하에서 왕실자문기관인 추밀원의 영향력을 의지하고 반정부 대중시위와 선거 보이콧을 수단으로 쿠데타 국면을 조성했던 아피싯 웨차치와(2008-2011) 민주당 총재와 수텝 트역수반 민주당 부총재 등의 존왕주의적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탄생한 권력을 부정한 대표적인 행위였다. 결과적으로 선거 불패를 자랑하는

6) 타이어로 10월 6일이란 의미이다. 현재까지 그 당시 유혈진압 사태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개적인 언급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Suthachai 2001).

7) 타이 헌법에서는 내각이 국정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내각이 갖고 있는 권한을 타이에서는 내각보다는 국왕이 행사한다. 타이의 국왕은 영국·일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진다(변해철 2005: 18).

친탁신계 정치세력을 향한 민주당의 ‘질투의 정치학’(politics of jealousy)은 ‘자비로운 가부장주의’(benevolent paternalism)를 상징하는 왕실과 이 왕실을 후견인으로 하는 군부의 품에 안기는 결단을 내리도록 하였다.

특히 2010년 방콕 도심지에서 있었던 레드셔츠 시위대에 대한 유희진압은 1976년 왕실이 관여한 쿠데타(palace-engineered coup, Kasian 2006)로서의 ‘혹 풀라’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타이 왕실에서 근대적이고 입헌주의적인 측면보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 측면을 포착한 커셔(Kershaw 2001: 139-140)의 관점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이러한 행태는 군주네트워크 내에서의 갈등에 해당하는 1973년과 1992년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는 국왕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섬으로써 민주화 지지자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 이론을 빌리자면 군주네트워크의 확장과정은 왕당파 지식인, 즉 유기적 지식인의 확장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차이(Tongchai 2008)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존왕주의에 기여한 까시안 테짜피라의 ‘탁신의 부패정치/반탁신의 청렴정치’ 대립구도를 거론한다. 까시안 등의 유기적 지식인에게 탁신체제(Thaksinocracy)는 선거제도(electocracy)를 수단으로 등장한 부패한 자본주의국가권력(corrupt capitalist state power)이다. 이들이 볼 때 탁신체제하에서 농촌주민들은 도시중산층, 특히 방콕시민들 덕분에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도 수적 우위를 갖고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rural majority)를 행사한다. 까시안(Kasian 2006)에 따르면 농촌주민들은 타이의 불균등 개발과정에서 희생되었지만 선거민주주의의 도입과 함께 표와 이권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히게 되었다. 그는 농촌주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체의 속성인 부패한 후

원주의(corrupt clientelism)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한때 쫄라롱겐대 정치학부 교수였던 기안(Khien 2006)은 쿠데타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고 말 할 수 없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토마스 홉스(T. Hobbes)의 자연상태에서 놓일 경우 평화와 질서 회복을 위해 군의 정치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쿠데타를 우회적으로 지지한다. 그가 보기에 쿠데타는 탁신 친나왓과 그와 가까운 정치세력들이 망가뜨려놓은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푸미폰 국왕의 신성화와 ‘좋은 쿠데타’, ‘타이식 민주주의’ 등과 같은 발상은 타이 근대민족주의 이론의 초석을 깔은 왓치라웃 라마 6세의 절대군주제에 대한 정당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서구 의회민주주의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본 왓치라웃은 타이 사회에서의 국왕의 존재를 인간 사회에서의 상호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어떠한 도전도 불가하다는 절대군주제 옹호론을 펴면서 헌정체제의 도입을 거부하였다. 헌정체제의 도입이 유럽에서는 득이 될 수 있어도 타이사회에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거부논리였다(Pasuk and Baker 2009: 106).

주목할 것은 라마 6세 왓치라웃이 이론화한 타이 국가의 정체성으로서의 ‘민족, 종교, 국왕’ 신성한 삼위일체론(trinitarian mystery) (Pasuk and Baker 1995: 235)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왕에 대한 불충은 민족과 종교에 대한 배반이라는 가혹한 국왕모독죄의 정당화 논리이기도 하다. 1976년 학생시위를 유혈 진압한 군부와 극우주의자들의 논리도 이것이었다. 결국 국왕이 원하는 정치체제는 지나치게 강력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갖지는 않는 정부하의 정치체제, 즉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를 원하고 있다는 오버홀트(Overholt 1988: 167-168)의 관점은 유효하다. 이때의 제한적 민주주의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democracy with the head of state), 곧 ‘타이식 민주주의’(Thai-style democracy)이다.

비교론적으로도 스페인 입헌군주제와 비교해볼 때 타이의 군주제는 심각하게 불신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탁신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내부에서 짜끄리왕조 라마 1세에 의해 왕위에서 축출된 딱신왕을 탁신 친나왓에 비유하는 등 국왕에 대한 불신이 점증했고(Unaldi 2012: 12). 이들 사이에선 프라이, 암맛 등과 같은 1932년 이전 삭디나 신분제도 용어가 회자되었다(박은홍 2015).

맥카고(McCargo 2005)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1년까지의 타이 군주네트워크(network monarchy)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군주가 위기 시에 정치적 결정의 최종 중재자가 된다. 두 번째로, 국가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군주로부터 나온다. 국왕은 국가적 사안을 설정하는 계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그의 생일 연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주는 그의 대행기관인 추밀원이나 신임을 받는 군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영역에 개입한다. 특히 전직 장성이자 전직 총리인 뽀렘 띠술라는 추밀원 원장은 연정 구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군과 여타 기관에서의 승진과정을 주시한다. 이를테면 중요한 지위에 적합한 인물을 등용하는 것도 뽀렘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제도나 절차보다는 ‘훌륭한 인물’(good man)에 의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법치나 인민주권과 같은 민주적 원리는 이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기에 타이의 입헌군주제는 민주주의 원리를 통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는 거리가 멀다(McCargo 2005). 오히려 ‘가부장적 전제정치’(despotic paternalism, Thak 2007)에 가깝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이러한 군주네트워크를 두고 ‘요상한 골동품’(curiously antique)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근대적 형태의 재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군주네트워크의 기저에는 1932년 입헌혁명 이전 시기에 대한 향수가 깔려 있다. 즉, 근대 이후의 군주가 절대군주가 될 수 없음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는 것이다. 신화를 창작하는 이들은 이미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을 라마 5세 쫄라롱껀 국왕과 동격으로 놓는다(McCargo 2005: 501). 푸미폰의 성역화가 성공을 거둔 셈이다. 여기에다가 뿌라웻 와시, 아난 뻬아라춘과 같이 개인적으로 덕망을 갖춘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 군주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 지식인 역할을 해낸다.

그런데 바로 2001년과 2005년에 대중들의 강력한 지지로 총리직에 오른 탁신 친나왓이 군주네트워크에 주도면밀하게 도전하려 한 것이다(McCargo 2005: 501). 이는 1976년 ‘혹 툴라’ 이후 팩스 짜끄리왕조(Pax Chakri)에 도전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그의 도전은 베링턴 무어(B. Moore)의 테제,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No bourgeois, no democracy)를 연상하게 한다. 탁신체제는 군주네트워크를 위협한 부르주아 정체(bourgeois polity)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성향의 부르주아, 이른바 ‘낙투라깃간므영’의 등장은 타이에서의 산업화와 민주화, 경제자유화와 정치자유화, 다시 말해 근대화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타이의 자본진영을 대표하는 상업인회의소, 산업인협회, 은행인협회 등은 1992년 5월 군부에 의한 유혈진압이 있던 직후 당시 군 출신 총리였던 쉐쨌다 크라쁘라운의 퇴진을, 1997년 7월 외환위기 직후에는 당시 수상이었던 차왈릿 용짜이웃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The Nation 1997/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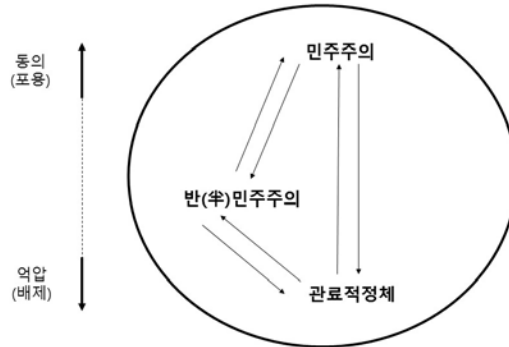
반면 레드셔츠는 탁신 친나왓이 제도화한 부르주아 정체와의 연대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낙투라깃간므영에 해당하는 탁신 친나왓의 포퓰리즘 정책은 군주네트워크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정 정치세력의 과도한 수준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자 왕실 주도의 자선 프로젝트와 군주네트워크를 향한 오만한 도전이었다. 또한 이것은 절대군주제를 근대적 어법으로 정당화한 타이 민족주의의 아버지로 불리우기도 하는 라마 6세 왓치라웃이 정초한 민족, 종교, 국왕 삼위일체에 대한 불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왕이 헌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초헌법적인 존재임을 보여준 정치적 사건이 바로 1976년 10월 유혈 쿠데타였다면, 절대군주제의 근대적 면모를 확고히 보여준 정치적 사건은 대다수의 중산층과 지식인, 노동운동, 농민운동, 적지 않은 시민단체, 왕당파 정당(proxy royalist political party)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 등의 지지하에서 탁신 친나왓을 수상직에서 몰아낸 2006년 9월 19일 군부 쿠데타였다. 특히 1992년 5월 반군부 민주항쟁을 이끈 진리의 힘당 당수 잠령 스리므영, 공기업연맹 의장 솜삭 코사이숙 등과 같은 저명한 정치사회, 시민사회 지도부들이 2006년 쿠데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인권과 시민사회분야의 저명 인사인 싸네 짜마리, 빠라웻 와시 등도 2006년 쿠데타를 타이식 국내문제 해결방식이라고 옹호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타이식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맥락에서 쿠데타를 ‘필요악’(necessary evil), ‘극약처방’(bitter solution) 등으로 표현하였다(Pattana 2006). 2006년과 2014년 두 번의 쿠데타는 타이 시민사회가 더 이상 민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Aim 2014).

이러한 맥락에서 흥미롭게도 탁신을 지지하는 레드셔츠는 1970년대 학생들 주도의 민주화투쟁, 1992년 5월의 중산층 주도의 민주화투쟁보다는 실종된 1932년 입헌혁명 정신과 혁명을 주도하였던 뿌리디 빠눔용의 정치적 이상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Streckfuss 2012, 436).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레드셔츠 내에서 절대군주제 시기의 용어인 귀족을 지칭하는 암맛, 중하층민을 지칭하는 프라이 등이 회자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Yoshinori 2014: 2).

<그림1> 타이의 근대적 절대군주제



주: 1) 원 둘레는 국왕모독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치적 행동의 허용 범위를 의미 2) 원 안의 화살표는 체제전환 방향을, 원 밖의 화살표는 억압과 포용의 정도를 각각 의미.

통차이 위니차꾼(Tongchai 2008: 2)에 따르면 타이에서의 근대화, 민주화 모두 왕실 엘리트들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왔다. 위의 <그림 1>에서의 원 둘레는 타이의 근대적 절대군주제가 허용하는 정치적 경계선(political boundary)을 의미한다. 동의 혹은 포용 정도가 높은 민주주의체제라고 하더라도 경계선을 넘게 되면 법적, 문화적 단죄가 이루어진다. 단죄의 근거가 형법 112조, 이른바 국왕 모독금지법이라고 한다면, 문화적 단죄는 법적 단죄의 정당성을 지원하는 존왕주의적 국가정체성에 해당하는 ‘타이다움’(깜뻠타이)이다. 2006년 왕당파 군부의 쿠데타는 의회를 장악한 탁신 주도의 부르주아 정체가 이 정치적 경계선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군주네트워크의 응징이었다.

IV. 국왕모독죄와 군주제

타이 군주제의 특수성을 옹호하는 이들은 흔히 타이의 전통, 즉 관습, 문화, 역사를 통해 타이 군주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이는 1932년 입헌혁명 이래 공식적으로 입헌군주제이고 국왕은 헌법 아래에 있으며 정치 위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탁신 추방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반탁신세력이 푸미폰 국왕에게 탁신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수상을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지만 국왕은 이것이 민주적이지도 않고 법에서 보장한 국왕의 권한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Surakiart 2008).

아피싯 민주당 집권 당시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던 피라판 싸리랏 위팍은 국왕모독죄와 관련한 로이터(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왕실은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모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타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된다고 하며,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의 안보 차원에서 신발을 벗고 벨트를 풀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했다(Reuters 2009/01/01).

타이에서는 1958년 싸릿 타나랏 군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왕실의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어 왔다(Naruemon 2012). 헌법에 따르면 타이 입헌군주의 권력은 분명 제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전통적인 절대군주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이상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김홍구 2010: 55).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왕모독금지법에 해당하는 형법112조에 따라 국왕, 왕비,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에게 3~15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⁸⁾ 국왕모독죄의 폐해를 바로잡자고 요구하는 세력에겐 왕당

파로 분류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의 보복이 도사린다. 국왕모독죄 철폐를 요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던 중 갑작스레 구속된 솜웃 프록사카셈숙에게 타이 형사법원은 2013년 1월에 10년 형을 선고했다.⁹⁾ 사회운동가인 그가 편집장으로 있던 잡지 ‘보이스 오브 탁신’(Voice of Thaksin)에 국왕을 모독하는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타이기자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옹호하고 나섰다.

또 2015년 8월 7일 타이 북부지역 치앙라이 군사법정은 일반인 두 여성에게 페이스북 상에서 왕실을 모독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각각 60년과 56년형이라는 사상 초유의 최고형을 선고했다(Amnesty International Public Statement 2015/08/07). 심지어 한 남성이 푸미폰 국왕의 애견을 비꼬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국왕모독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The Guardian 2015/12/14). 2015년에는 ‘늑대 신부’라는 학내 연극에 참여한 학생들이 국왕모독죄로 형을 받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유럽의 경우 국왕모독죄가 있는 국가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이 국가안보와 연관되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처벌 수위는 벌금이나 2년내지 5년 형에 그치고 있다. 국왕모독죄 법규정이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도 가벼운 벌금이나 최대 4개월형을 받게 된다. 물론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2년형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국왕모독죄 처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덴마크의 경우 1934년

8) 국왕모독금지법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퐁’이란 별칭을 가진 암퇘지 땅나파꾼의 죽음이다. 그는 2010년 5월 친탁신 계열 레드셔츠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총리 아피싯의 비서에게 국왕을 모독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2011년 8월에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서 문자발신 방법조차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은 그에게 국왕모독죄 최고형에 컴퓨터범죄 최고형 5년을 더해 20년형을 선고했다. 아퐁은 수감 후 얼마 뒤 옥중에서 숨졌다. 인권단체들과 레드셔츠 진영은 아퐁의 장례식을 이틀간 치렀다(박은홍 2012).

9) 2017년 2월 23일 대법원은 솜웃의 형량을 10년에서 6년으로 감형하였다. 심문 과정에서 15번의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Bangkok Post 2017/02/23).

이후 이 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고,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경우 지난 몇 년 사이에 적용 사례가 있었지만 벌금이나 최단기 징역형 정도였다. 영국이나 일본에도 군주제를 보호하는 법적 조항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Streckfuss 1995: 446). 반면 타이의 국왕모독금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Streckfuss 2012/03/18).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전에 타이의 최초 근대 법률상에서 국왕모독죄와 유사한 법이 제정된 것은 1900년이고 1908년에는 형법에서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바트에 벌하도록 하였다. 라마 7세 통치시기인 1927년엔 징역 최고 10년, 벌금 최고 5천 바트로 대폭 강화되었다. 1932년 입헌혁명 이후 국왕모독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민주적 방향으로의 정치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어 징역 최고 7년, 벌금 최고 2천바트로 그 처벌 수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주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고려하여 양심과 공익, 그리고 헌법정신의 테두리 내에서 군주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님을 명시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사실상 입헌군주제 이외의 공화주의와 같은 다른 대안적 정치체제나 국왕의 역할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는 않았다(Somchai and Streckfuss 2008: 4-9).

왕당파 군부 엘리트인 싸릿의 집권 하에 있던 1959년 이후, 특히 1976년 이후 왕실에 대한 신성화가 고조되었다. 이제 왕실에 대한 언급자체가 금기시되었다. 모든 헌법들은 국왕을 가장 높이 숭배해야 할 대상이자 어떤 비난도 받아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명시하였다. 요컨대 군주제가 있는 나라들의 경우 민주화와 함께 왕실의 대한 보호는 줄어들고 기본권에 대한 보호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타이의 경우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의 수준과 무관하게 국왕모독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해졌고 확대되었다(Somchai and

Streckfuss 2008: 1). 바야흐로 1980년대 중반에 가장 강력하면서 국민들의 충성심을 한 몸에 받고 국민통합과 국가의 상징이 된 당사자는 40년간 가장 군림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었다. 권력의 균형이 민주적 정당제도가 아닌 국왕으로 이동했던 것이다(Chai-anan 1989a). 그는 국민들의 열망을 통합하는 상징이 되었다(Connors 2003: 128).

푸미폰 국왕은 1960년대 후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사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군부와 거리를 두며 민간정권 출범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인도차이나(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에 고무된 학생들의 움직임이 급진적 양상을 보이자, 결국 이들에 대한 군과 경찰 그리고 우익 민병대의 유혈진압을 묵인했다. 이때 신왕(神王)으로서의 카리스마를 구축해가고 있던 푸미폰 국왕은 민주화의 확장성이 제도로서의 왕실의 이익을 침해하려 할 경우 군부, 그리고 극우세력과의 제휴를 마다하지 않는 보수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왕모독죄가 1976년 유혈 쿠데타 이전까지만 해도 최고 형량이 7년이었는데 그 이후 15년으로 늘어났다. 이는 1932년 이전 절대군주제 하에서의 형량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민헌법으로도 일컬어진 1997년 헌법은 1992년 반군부 민주항쟁의 성과였다. 1992년 당시 민주화를 이끌어낸 시민사회세력은 쿠데타→신헌법제정→새로운 정당 출현→총선거 실시→새로운 의회정치 개막→평화의 시기→정치적 위기→쿠데타라는 타이 고유의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도로서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1993년 하원은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로 한 헌법개혁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추언 립파이 민주당 정부에 이어 반한 실라빠야차 정부가 들어서자 헌법개혁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방콕 중심의 정계, 학계에서는 이를 우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개혁위원회의

로드맵에 따라 뿌라웻 와시를 수장으로 하는 민주주의발전위원회(CDD)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발전위원회는 헌법기초위원회로 발전하였다. 이 위원회는 9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76개도에서 1인씩 선발되었고, 나머지 23명은 정치학자와 행정가 8명, 법률전문가 8명, 헌법 초안 작성 유경험자 7명으로 구성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덕망과 명성을 얻고 있던 뿌라웻 와시, 우타이 핀차이춘, 아난 뽀아라춘 등이 이끌었다. 이렇게 전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신헌법은 1997년 9월 12일 열린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찬성 518표, 반대 16표, 기권 17표로 통과되었다.¹⁰⁾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국민헌법이지만 1976년 ‘혹 풀라’ 이후 형량이 대폭 강화된 형법 112조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헌법 개혁을 주도한 뿌라웻 와시, 아난 뽀아라춘 등이 존왕주의자인데에서 알 수 있듯이 군주네트워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헌법개혁이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국민헌법으로부터 탄생한 권력이 바로 빈민층과 소외된 북부, 동북부지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으면서 왕당파의 눈에 절대군주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라마 6세의 국가 정체성 틀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는 점이다. 결국 타신을 몰아낸 2006년 쿠데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기소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미 언급했듯이 1976년 쿠데타 이후 군부는 국왕모독죄 형량을 늘리고 국왕의 역할을 확대했다.¹¹⁾ 2010년 4~5월 아피싯 민주당 정권하에서 군부는 반(反)기득권 저항세력인 레드셔츠를 탄압하면서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계기로

10) 1997년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홍구(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1976년 쿠데타로 성립한 국가행정개혁위원회(NARC)는 29개조의 새로운 헌법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중 절반이상이 국왕의 지위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제19조에서는 국왕이 직접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국왕의 권력을 증대시켰다(변해철 200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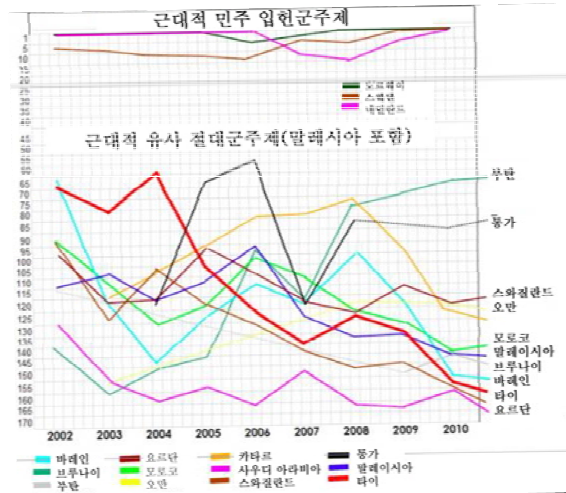
다시 국왕모독죄 사례, 특히 온라인 범죄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잉락 민선정부가 세워졌던 2011-201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도 국왕모독죄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2011년 선거를 통해 탄생한 잉락정부조차 왕실자문기관인 추밀원과의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부와 보수기득권층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반면 ‘탁신 포비아’ 혹은 탁신 귀신이란 의미의 ‘피 탁신’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중산층 대부분은 군에 대한 민간정부의 통제가 실행되지 못하거나 국왕모독죄라는 가혹한 자유권 구속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¹²⁾ 아래 <그림 2>와 <그림 3>은 2006년 9월 왕실 수호를 명분삼아 일으킨 쿠데타 이후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국왕모독죄건수가 잉락 민선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5월 22일 군부 쿠데타의 지도자인 빠라웃 찬오차 장군은 공식적으로 국왕모독을 쿠데타 이유로 들지 않았으나 추후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이를 거론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옹호단체인 아이러(iLaw)에 따르면, 2014년 쿠데타 이후 시기는 타이 역사상 가장 많은 국왕모독죄 범죄자를 양산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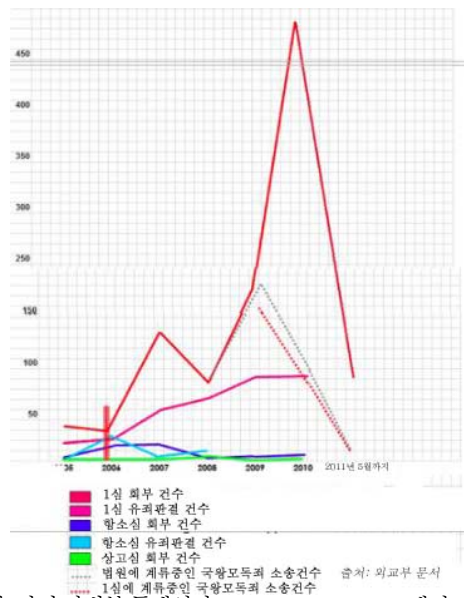
12) ‘탁시노포비아’, ‘피 탁신’이란 용어는 2017년 1월 16일과 1월 18일에 각각 이루어진 방콕과 치앙마이에 소재하는 두 대학의 익명의 교수와의 면담에서 들었다.

<그림 2> 언론자유지수 순위 (2002-2010)



출처: 국경없는 기자들, Streckfuss 2012/3/18에서 재인용.

<그림 3> 1심-2심-3심 법정에 계류중인 국왕모독죄 소송건수(2005-2011)



출처: 타이 사법부 통계연감, Streckfuss 2012/3/18에서 재인용.

아이러(iLaw)¹³⁾와 뿌라차타이(Prachatai)¹⁴⁾는 20여건의 국왕모독죄 용의자, 피고, 기결수사례를 수집해왔다. 뿌라차타이 영문판(Prachatai 2014/07/15; 2017/02/10)에서 공개한 아래 구체적 사례들은 국왕모독죄금지법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가 2006년 쿠데타 이후 얼마나 자의적으로 또 과도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이에서의 국왕모독죄는 형식상으로는 입헌군주제하의 형법조항이지만 국민의 주권과 자유권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이식 입헌군주제 즉, 근대적 절대군주제의 상징적인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¹⁵⁾

<2014년 쿠데타 이후 국왕모독죄 관련 기소자>

1. 탐마삿대학을 졸업한 아피чат 학생은 2014년 5월 23일 쿠데타에 반대 시위에 동참했다가 체포됐다. 그는 2014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국왕모독죄 혐의를 받았다. 112조의 혐의 인정을 경찰로부터 강요받기까지 7일 동안 억류되었고, 경찰의 구속 영장 발부를 법원이 거부함에 따라 석방되기 전까지 방콕특별형무소에 26일 동안 구금됐다.

2. 전 프어타이당 국회의원 뿌라싯 차이쓰리씨는 2014년 5월 7일 국왕모독죄 위반사례로 추정되는 대중 연설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원이 그의 보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방콕특별형무소에 구금됐다.

3. 레드셔츠 활동가인 솜밧 분응암아농(일명 눈링)은 군사평의회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다. 솜밧은 군

13) 단체명 아이러(iLaw)는 Internet Law Reform Dialogue의 줄임말이다.

14) “자유로운 국민”이라는 뜻의 뿌라차타이는 인권, 사회운동 관련 기사를 다루는 비영리 온라인 언론매체이다.

15) 1912년 절대군주제 전복 음모를 피했던 소장파 장교들이 분류했던 세 유형의 정부 형태는 절대군주제, 제한군주제, 공화제였다(조흥국 2015: 91).

정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피하던 와중에도 온라인상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2014년 6월 5일 체포됐으며 병영에 7일간 억류됐다. 나중에 동북부지역에서 온 경찰들이 그를 페이스북 상에서 국왕모독죄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구속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4. 정치적 팻캐스트 프로그램의 운영자인 카타웃은 국가평화질서회의(이하 NCPO)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다. 그는 2014년 6월 3일 진술서를 썼고 7일 동안 구금됐고, 그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왕모독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의 보석을 기각했다. 그는 방콕특별형무소에 수감됐다.

5. 재단사인 찰리야오 역시 NCPO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다. 그는 2014년 6월 3일에 진술서를 작성했고 7일 동안 구금됐다. 그는 음성 파일을 재업로드 했다는 것과 유튜브에 4개, 웹사이트에 1개의 파일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법원은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방콕특별형무소에 수감됐다. 그 해 9월 1일 법원은 찰리야오에게 형법 112조와 컴퓨터범죄법 14조를 적용, 징역 3년형을 내렸다. 피고가 유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형량은 반으로 줄었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 사이버공간에서 ‘룽 실라’라는 필명의 작가이자 시인인 시라폼도 NCPO에 의해 소환되어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순응하진 않았다. 시라폼은 2014년 6월 25일에 동북부 까라신지역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7일 동안 구금됐으며 그는 인터넷 상에서 국왕모독죄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포스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방콕특별형무소에 수감됐다.

7. 동북부에 위치한 쾅켄대학의 학생 활동가인 빠띠왓은 왕실을 소재로 한 정치극 “늑대 신부”를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8. 연극인이자 전 뿌라까이파이간라콘 퍼포먼스란 예술가 단체의 대표 폰팁도 경찰에 의해 국왕모독죄로 간주된 왕실을 다룬 정치극 “늑대 신부”를 제작하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9. 택시 운전자 유타삭은 국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한 승객에 의해 고발되었다. 그 승객은 경찰에 2014년 1월 경찰에 대화 내용 녹음본을 주었다. 그 지역 경찰관이 2014년 6월 2일 택시 차고에서 그를 체포했다. 법원은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방콕특별형무소에 구금됐다.

10. 마하나콘기술대학 학부생인 아카라뎃은 2014년 초 페이스북상에 국왕모독죄로 보이는 메시지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아카라뎃의 페이스북 친구가 그의 페이스북상에 국왕을 모독하는 문구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자 2014년 6월 수티산지역 경찰들이 그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2년간 수감생활을 했고 2016년 6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¹⁶⁾

11. 북부지역 치앙라이 원주민인 싸막은 왕의 그림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그 그림은 치앙라이 뜨엥지역의 한 마을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2014년 7월 9일에 체포됐다.

12. 국민 가수에서 레드셔츠 활동가로 전환한 타닛(일명 텀 단디)는 2014년 레드셔츠 집회에서 국왕모독죄로 간주되는 대중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그는 NCPO의 진술서 작성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기소됐다.

13. 익명의 한 남자는 2010년 북부 치앙마이 지역의 한 강에 국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4. 2016년 12월 짜투팻 분파타라락사, 일명 ‘파이’는 왓찌라롱건

16) 아카라뎃의 페이스 북상의 포스팅 제목은 “똘 아저씨도 국왕을 사랑하는데요” (“นี่ผมก็รักในหลวงนะ”)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러(ILaw)의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s://freedom.ilaw.or.th/blog/112-series-Akaradej>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국왕모독죄 혐의를 받고 기소된 첫 사례가 되었다. 그는 타이 동북부 소재 쾨깐대학 법학과 학생이자 다오딘이라는 단체와 새로운 민주주의운동(NDM)의 활동가로 새로운 국왕의 즉위식이 있는 다음 날인 12월 2일 본인 페이스북에 왓치라롱껀 국왕에 관한 비비시 타이(BBC Thai)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12월 3일 아침에 체포됐다. 그에겐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범죄법 위반도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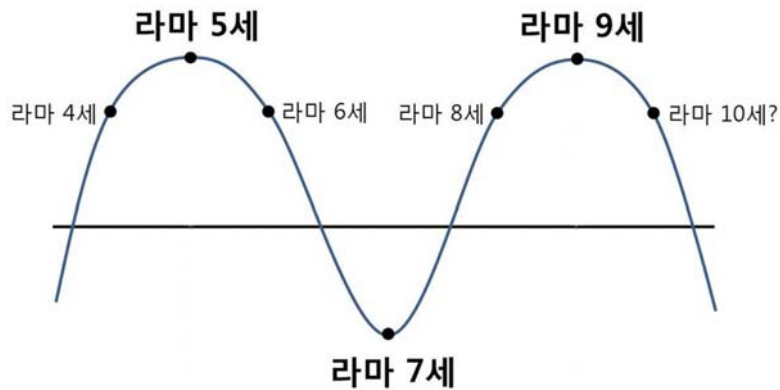
V. 결론

타이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근대적 속성과 전근대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적 정체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관료적 정체가 취약한 시민사회와 정당사회를 기반으로 군과 관료가 의사결정을 독점한다면, 근대적 절대군주제 하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 경험을 통해 성장한 시민사회와 정당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구성하기도 하나 선출된 권력이 군주네트워크의 이익과 권위를 침해할 경우 왕권수호를 기치로 한 군사 쿠데타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주화 이론에서 상정하는 민주화의 주역으로서의 시민사회, 정당사회와 다르다.

특히 타이에서는 군주네트워크 일원으로서 선거 결과 불복을 반복하는 민주당이 있는 한 민주주의가 타이에서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다. 상원과 비상대권을 군이 장악하도록 한 2016년 헌법체제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민주당과 타이의 중산층이 ‘탁신 포비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군부의 반헌정적 행위에 대해 국왕의 승인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 타이의 정치체제는 1932년 입헌혁명 이전 절대군주제의 근대적 변형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기존 타이 정치체제를 두고 명명되었던 ‘관료적 정체’, ‘반(半)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 등과 같은 개념은 모두 근대적 절대군주제의 하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짜끄리왕조의 순환주기



주: 1) 위 그림에서 x축은 시간을, y축은 정치적, 도덕적 지배력의 기복을 각각 의미 2) 라마 10세 시기는 순환주기가 후퇴기 가능성을 시사.

무엇보다도 타이 정치체제의 변화는 군주제의 불변성이라는 정치적 일관성(political continuity)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짜끄리왕조 위세의 기복을 보여주는 위의 <그림 4>가 보여주듯이 1932년 절대군주제의 종식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짜끄리왕조를 라마 5세 쫄라롱껀 시기와 버금갈 정도로 그 위세를 회복시킨 당사자가 바로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이다.

그러나 근대적 절대군주제가 정착되는 중대국면을 2006년 쿠테타, 더 멀게는 1976년 쿠테타로 상정해볼 수 있으나 왕당파가 군부

와 민주당의 힘을 배경으로 다소 그 위세를 회복한 계기는 1947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그 해 11월 일단의 군부세력이 라마 8세 아난다 마히돈 국왕의 사인(死因) 규명과 1932년 입헌혁명 이전 왓치아웃 국왕이 내걸었던 ‘국가, 종교, 국왕’ 수호를 내걸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듬 해에 민주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국왕이 상원을 임명하고, 군을 직접 통솔하고, 입법을 거부할 수 있고, 장관을 해임하고, 법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법개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마 8세의 의문사 직후는 짜끄리왕조로 보자면 희생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중대국면에 해당하지만 싸릿 통치 시기 이전까지 이렇다 할 국왕의 정치적 역할은 거의 없었다.

이후 라마 9세 푸미폰 국왕은 그의 독특한 카리스마와 1957년 쿠데타를 일으킨 왕당파 싸릿 타나랏 장군의 전적인 지원과 또다른 왕당파 뿌렘 띠술라는 통치 시기인 1980년대의 뿌레모크라시(Premocracy)에 힘입어 <짜끄리왕조의 순환곡선>선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근대화를 배경으로 성장한 자본가집단을 대표하는 탁신 친나왓에 의해 완성된 부르주아 정체(bourgeois polity)의 위력은 푸미폰 국왕을 더 이상 정치적 갈등의 최종 중재자이자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다. 2006년과 2014년의 쿠데타는 이러한 도전에 따른 군주네트워크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인 바, 국왕모독금지법 위반 사례의 급증은 동의와 강제를 결합한 세련된(sophisticated) 헤게모니적 지배가 아닌 강제적 방식으로 군주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근대적 절대군주제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부르주아 정체가 군주네트워크에 의해 붕괴된 이후 타이 정치체제의 행동반경을 한정하는 정치적 경계(political boundary)로서의 국왕모독죄의 위력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1932년 입헌혁

명 이후에도 기복은 있었지만 사실상 ‘민족, 종교, 국왕’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제하는 절대군주제 시기의 국가정체성이 지속되는 근대적 절대군주제로서의 타이 정치체제를 확인하게 한다.

〈참고문헌〉

- 김흥구. 2006. “태국의 1997년 개정헌법과 정치개혁.” 『비교법학』 17: 1-31.
- _____. 2010.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 요인 분석.” 『동남아연구』 19(2): 53-108.
- 박은홍. 1994. “타일랜드 민주화 연구-1973~1976년과 1992년~현재 를 중심으로 한 비교분석.” 『동남아시아연구』 3: 150-187.
- _____. 2012. “아푹의 죽음과 태국의 형법 112조.” *Emerics* 10월 29일.
- _____. 2015. “포스트 탁신시대의 ‘붉은셔츠’: 이념, 조직, 행동.” 『동남아시아연구』 23(1): 89-126.
- 변해철. 2005. “태국의 민주화와 1997년 헌법개정.” 『외대논집』 18(2): 1-25.
- 조흥국. 2015. “1885년 1932년 태국에서의 의회주의 논의.” 『동남아 연구』 25(2): 81-112.
- 末廣 昭(수에히로 아키라). 1993a. “タイの軍部と民主化運動.” 『社會科學研究』 44(5): 48-95.
- _____. 1993b. 『タイ 開發と民主主義』. 岩波新書.
- 玉田 芳史(타마다 요시후미). 2003. 『民主化の虚像と實像——タイ 現代政治變動のメカニズム』. 京都大學學術出版會<地域研究叢書>.

- Anderson, Benedict. 1977. "Withdrawal Symptoms: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October 6 Coup."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3): 13-30.
- _____. 1990. "Murder and Progress in Modern Siam." *New Left Review* 181: 33-48.
- Anek, Laothamatas. 1988. "Business and Politics in Thailand: New Patterns of Influence." *Asian Survey* 28(4): 451-470.
- _____. 1992. *Business Associations and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Thailand: From Bureaucratic Polity to Liberal Corporatism*. Oxford: Westview Press.
- Chai-Anan, Samudavanija. 1982. *The Thai Young Turk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_____. 1989a. "Thailand: A Stable Semi- Democracy." Larry Diamond, Juan Linz, and Seymour Martin Lipset (eds.),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sia*.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_____. 1989b.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Thailand: Continuity and Change." Robert Scalapino et al.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el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 Connors, Michael K. 2003. *Democracy and National Identity in Thailand*. London: Routledge.
- Morell, David and Chai-Anan, Samudavanija. 1981.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Reform, Reaction, Revolution*. Cambridge: Oelgeschlager.
- Diamond, Larry. 1989. "Introduction: Persistence, Erosion, Breakdown, and Renewal." Larry Diamond, Juan J. Linz,

- Seymour Martin Lipset (eds.).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sia*. Berkel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Elliot, David. L. 1978. *Thailand: Origins of Military Rule*. London: Zed.
- Ji, Ungpakorn. 2007. *A Coup for the Rich: Thailand's Political Crisis*. Bangkok: Workers Democracy Publishing.
- _____. 2010. *Thailand's Crisis and the Fight for Democracy*. Bangkok: WDPres.
- Kasian, Tejapira. 2006. "Toppling Thaksin." *New Left Review* 38(1): 11-37.
- Kershaw, Roger. 2001. *Monarchy in South-East Asia: The Faces in Trans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hien, Theeravit . 2006. "สิทธิในการทำรัฐประหาร." *Matichon* October 17.
- Kobkua, Suwannathat-Pian. 2002. "The Monarchy and Constitutional Change since 1972." Duncan McCargo (ed.), *Reforming Thai Politics*. Copenhagen: NIAS Press.
- _____. 2004. *Kings, Country and Constitutions: Thailand Political Development 1932-2000*. Routedge Curon: London and New York.
- McCargo, Duncan. 2005. "Network Monarchy and Legitimacy Crises in Thailand." *Pacific Review* 18(4): 499-519.
- Morell, David and Chai-anan, Samudavanija. 1981.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Reform, Reaction, Revolution*. Cambridge: Oelgeschlager.
- Overholt, William H. 1988. "Thailand: A Moving Equilibrium." Ramsay Ansil and Wiwat Mungkandi (eds.), *Thailand-U.S.*

- Relations: Changing Political, Strategic, and Economic Factor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Pasuk Phongpaichit and Chris Baker. 1995. *Thailand: Economy an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9. *A History of Thail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tana, Kitiarsa. 2006. "In Defence of the Thai-Style Democracy." Unpublished Paper.
- Porphant, Ouyyanont. 2014. *Thailand: A New Polity in the Making?* Singapore: ISEAS Perspective 59, ISEAS.
- Ramsay, Ansil. 1988. "Contemporary Thai Political Evolution." Ramsay Ansil and Wiwat Mungkandi (eds.), *Thailand-U.S. Relations: Changing Political, Strategic, and Economic Factor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 Riggs, Fred W. 1966. *Thailand*.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 Somboon, Suksamaran. 2000. "Political Buddhism in Thailand after Year 2000s." Unpublished Paper.
- Somchai, Preechailpakul and Streckfuss, David. 2008. "Ramiication and Re-Sacralization of the Lese Majeste Law in Thailand." Unpublished Paper.
- Somchai, Phatharathananunth. 2011. "The Politics of Postpeasant Society: The Emergence of the Rural Red Shirts in Northeast Thailand." Paper Presented at the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April 19-21.
- Streckfuss, David. 1995. "Kings in the Age of Nations: The Paradox of Lese-Majeste as Political Crime in Thailand." *Comparative Studies in History and Society* 37(3): 445-475.

- _____. 2012. "An 'Ethnic' Reading of 'Thai' History in the Twilight of the Century-Old Official 'Thai' National Model." *South East Asia Research* 20(3): 419-441.
- Suehiro, Akira. 1989. *Capital Accumulation in Thailand, 1855-1985*. Tokyo: Centre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 Sukhumbhand, Paribatra. 1993. "State and Society in Thailand: How Fragile the Democracy?" *Asian Survey* 33(9): 879-893.
- Supalak, Ganjanakhundee. 2014. "Junta Signals the Return of 'Bureaucratic Polity.'" *The Nation* August 6.
- Surakiart, Sathirathai. 2008. "Monarchy: An Open Letter in Reply to the Economist." *Prachatai* December 12.
- Suthachai, Yimprasert. 2001. "The Coming of the 6th October 1976 Suppression in Thailand."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ay 18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May 15-17.
- Thak, Chaloeontiarana. 2007. *Thailand: The Politics of Despotism Paternalism*.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 Thitinan, Pongsudhirak. 2008. "Thailand since the Coup." *Journal of Democracy* 19(4): 140-153.
- Tongchai, Winichakul. 2008a. "Toward the End of King Bhumibol's Era: The Historical Suicide of Royalist Democracy." Paper Presented at CDDRL Workshop on Monarchies in Transition, Stanford University, June 5-6.
- _____. 2008b. "Toppling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1): 11-37.
- Unaldi, Serhat. 2012. "Modern Monarchs and Democracy."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1(2): 5-34.

- Yos, Santasombat. 1989. "The End of Premocracy in Thailand." *Southeast Asian Affair* 1989: 317-335
- Yoshinori, Nishizaki. 2014. "Peasants and the Redshirt Movement in Thailand: Some Dissenting Voices."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1(1): 1-28.

인터넷 자료

- BBC. 2016. "Thailand's Lese-Majeste Laws Explained?" <http://www.bbc.com/news/world-asia-29628191> (검색일: 2016. 12.31)
- Naruemon, Thabchumpon. 2012. "Thailand: Contested Politics and Democracy." <http://www.peacebuilding.no/Regions/Asia/Publications/Thailand-contested-politics-and-democracy> (검색일: 2017.01.15).
- Pierre, Rousset. 2016. "Thailand: A High Risk Succession." <http://www.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4746> (검색일: 2017.01.05)
- Prachatai. 2014/7/15. "2014 Coup Marks the Highest Number of Lese Majeste Prisoners in Thai History." <https://prachatai.com/english/node/4218> (검색일: 2017.01.05)
- _____. 2017/2/10. "Pai Dao Din Formally Indicted for Lèse Majesté." <http://www.prachatai.com/english/node/6917> (검색일: 2017.02.15)
- Reuters. 2009/1/9. Thai Justice Minister Ssays Lese Majeste about "National Security." <http://in.reuters.com/article/idINIndia-37357920090109> (검색일: 2017.01.10)

90 동남아시아연구 27권 1호

Serhat, Uenaldi. 2016. "Did Thai King Help Stifle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6487585> (검색일: 2017.
01.09)

Streckfuss, David. 2012/3/18. "Lese Majeste and Monarchies."
<https://prachatai.com/english/node/3112> (검색일: 2016. 12. 28)

인터뷰

2017년 1월 12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타이 현지에서 익명의
대학교수 및 활동가들과 수차례 면담 진행.

(2017.01.31. 투고, 2017.02.15. 심사, 2017.02.16. 게재확정)

<국문초록>

근대적 절대군주제와 국왕모독죄: 타이 정치체제 재검토

박 은 흥

타이 정치체제가 관료적 정체(bureaucratic polity) 혹은 반민주주의(semi-democracy)로 회귀하였다고 얘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국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Privy Council)의 정치적 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근대적 절대군주제라는 분석적 개념을 통해 타이식 입헌군주제의 독특한 특징을 밝히고 있다. 요컨대 ‘네트워크 정치’(network politics)에 기반하는 타이식 입헌군주제(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규범에 토대한 전형적인 입헌군주제와 배치된다. 이는 타이 국왕이 실제로는 정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안에 있음을, 또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군주제를 보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왕은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는 반인반신이자 국가통합의 중심으로 추앙되었다. 심지어 왕실이 관여된 1976년 ‘혹 풀라’ 이후에도 국왕의 신성한 지위는 도전을 받지 않았고 국왕모독죄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국왕모독죄는 군부 쿠데타의 주된 명분이 되었다. 특히 군주네트워크와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한 탁신 네트워크에 기반한 부르주아 정체 간의 대결돌로부터 야기된 2006년 쿠데

타와 이후 친탁신계 정부를 전복한 2014년 쿠데타를 계기로 국왕모독죄 사례가 급증하였다. 관료적 정체, 반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타이에서의 근대적 절대군주제는 군부, 지식인, 민주당,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조직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왕모독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주제어: 근대적 절대군주제, 타이식 입헌군주제, 국왕모독죄, 관료적 정체, 부르주아 정체, 반(半)민주주의, 타이식 민주주의, 군주네트워크

<Abstract>

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 and
Lèse-Majesté Law:
Thai Political Regime Reconsidered

PARK Eun Hong
(Sungkonghoe University)

Thai political regime is said to have returned to bureaucratic polity or semi-democracy. However, this kind of perspective does not find the political interference of Privy Council which is a body of Monarch of Thailand.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discover the unique traits of 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 which can be defined as the 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 In short, 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 based on network politics is contradictory to the normal constitutional monarchy whose norm is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rule.” This means Thai king is in politics not above politics in reality. Thai monarchy has interfered in diverse ways in terms of mediating political conflicts and protecting the monarchy as a institution. In this process, the king has been worshiped as demigod who practices Buddhism and the center of national integration. Even after the 6 October 1976 massacre in which the palace got involved

King Bhumibol Adulyadej's sacred position was not challenged. Rather lèse-majesté law became more draconian for status quo. Since then, lèse-majesté was cited as one of the major rationales for the military coup. The 2006 coup which was triggered by the clash between network monarchy and bourgeois polity based on Thakin network marked a surge of the lèse-majesté cases. The 2014 coup had consecutively increased the number of lèse-majesté prisoners. It can be said that the 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 in Thailand including bureaucratic polity, semi-democracy and democracy is bounded by lèse-majesté law which network monarchy players such as military, intellectuals,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civil society groups support.

Key Words: Modern Form of Absolute Monarchy, Thai Way of Constitutional Monarchy, Lèse-Majesté Law, Bureaucratic Polity, Bourgeois Polity, Semi-Democracy, Thai-Style Democracy, Network Monarchy